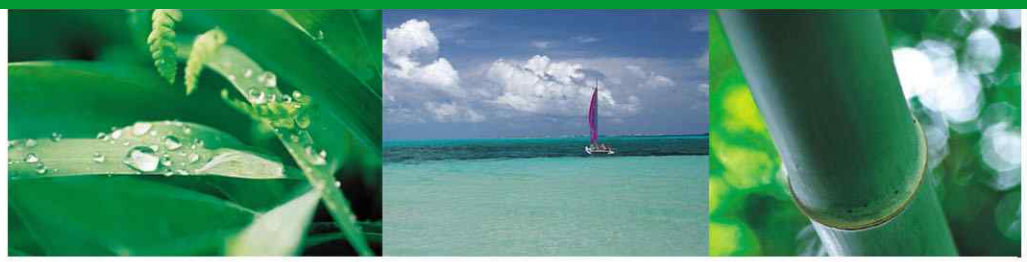
주간건설 Review

696호 2021.10.29.(금)



(사)한국건설경영협회
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
홈페이지 : http://www.kfcc.or.kr, 연 락 처 : 02-771-7936
주 소 : (121-916)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-2103

주간건설 Review

CONTENTS

▣ 업계 동향

- 롯데건설, ESG 경영 강화 위해 지역파트너사 육성
- 포스코건설, 건설현장 비산먼지 저감기술 녹색기술인증
- 동부건설, 안전보건경영실 신설

▣ 건설경제 일반동향

- 2020년 기업경영실적 전반적으로 악화
- 일산대교 공익처분 두고 논란

▣ 건설 제도·정책 동향

- 서울시, 공공공사의 '하도급대금 직불제' 의무화
- '도시개발법 개정안' 의원 입법발의
- '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' 제정안 행정예고
- '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' 입법예고

주간 건설 REVIEW

<기간 : 2021.10.23(토)~2021.10.29(금)> 제696호 2021.10.29(금)

<업계 동향>

◈ 롯데건설, ESG 경영 강화 위해 지역파트너사 육성

하석주 대표이사

- 10월28일 롯데건설은 지역 강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더불어 ESG(환경·사회문제·지배구조) 경영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지역 파트너사를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힘
- 롯데건설은 지난 8월 광주시, 대구시, 인천시를 거점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파트너사 발굴을 시작해 지자체와 지역건설협회로부터 2045개 우수기업을 추천받았고, 협업 가능성을 검토해 167곳을 선정하였음
- 롯데건설은 파트너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펀드 형태의 자금 지원, 복리후생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

◈ 포스코건설, 건설현장 비산먼지 저감기술 녹색기술인증

녹색기술 인증식에 참석한 김경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과 김병곤 포스코건설 사업관리실장(왼쪽부터)

- 10월28일 포스코건설은 자사가 개발한 건설현장 비산먼지 저감 기술이 환경부의 녹색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음
- 녹색기술인증은 환경부가 에너지·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온실가스·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이며, 인증을 획득한 건설업체는 3년 동안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(PQ)와 관련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음
- 포스코건설이 개발한 기술은 물에 친환경 표면경화제를 섞어 살수하는 방식으로, 기존에 물을 살수하거나 플라스틱 방진덮개를 사용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환경면에서도 우수한 기술로 평가받았으며, 포스코건설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이 기술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지난 6월부터 건설 현

장에 확대 적용하고 있음

○ 포스코건설은 이번 기술이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건설 현장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

◈ 동부건설, 안전보건경영실 신설

○ 10월27일 동부건설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대표이사 직할 '안전보건경영실'을 신설, 안전보건조직을 확대했다고 밝혔음

○ 동부건설은 이번 비정기 '원포인트' 인사를 통해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, 안전보건경영실 신설 외에도 대표이사가 주관하는 모든 회의를 '안전보건경영회의'로 명칭을 변경해 안전보건경영 현안과 이슈, 개선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 중임

○ 또한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의 빈틈을 발굴하고 제고하기 위해 점검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, 최근 동부건설이 인수·합병한 한진중공업 안전팀과의 협업을 통해 양사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장점을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음

주간 건설 REVIEW

<기간 : 2021.10.23(토)~2021.10.29(금)> 제696호 2021.10.29(금)

<건설경제 일반동향>

◈ 2020년 기업경영실적 전반적으로 악화

○ 10월27일 한국은행은 '2020년 기업경영분석 결과'를 발표하였음

○ 지난해 국내 전 산업 분야의 성장성과 수익성, 안정성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가운데 건설업도 것으로 나타났으며, 건설업도 지표 악화를 기록하였음

<주요내용>

❒ 성장성

- 2020년 국내 전산업 부문의 매출액증가율(0.4% → -1.0%)은 하락하였으나 총자산증가율(6.1% → 7.9%)은 전년대비 상승하였음
- 건설업의 경우에도 매출액증가율(-0.02% → -0.68%)로 하락하였으나 전산업 평균 매출액증가율 감소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추세를 유지하였으며, 총자산증가율(6.8% → 8.9%)도 전년대비 상승하였음

주요 성장성지표

(%)

	매출액증가율			총자산증가율			유형자산증가율		
	2018	2019	2020	2018	2019	2020	2018	2019	2020
전 산 업	**4.0**	**0.4**	**-1.0**	**5.8**	**6.1**	**7.9**	**5.4**	**6.8**	**6.2**
건 설 업	-0.5	-0.0	-0.7	3.3	6.8	8.9	6.7	11.7	10.1

❒ 수익성

- 2020년중 국내 전산업 부문의 매출액영업이익률(4.2% → 4.2%) 은 전년과 동일하나 매출액세전순이익률(3.7% → 3.9%)은 전년보다 상승하였음
-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영업이익률(4.8% → 4.7%)로 소폭 감소하였고, 매출액세전순이익률(4.6% → 4.4%) 또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

주요 수익성지표

(%)

	매출액영업이익률			매출액세전순이익률		
	2018	2019	2020	2018	2019	2020
전 산 업	**5.6**	**4.2**	**4.2**	**5.3**	**3.7**	**3.9**
건 설 업	5.0	4.8	4.7	4.8	4.6	4.4

- 한편, 2020년 전산업 부문의 금융비용부담률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여 금융비용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(326.53% → 328.95%)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
- 건설업의 경우 금융비용부담률,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소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에 따른 이자보상비율(523.75% → 443.49%)도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, 전체 산업평균 이자보상비율과 비교해서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

이자보상비율 추이

(%)

	2018	2019	2020
이자보상비율(전산업)	470.86	326.53	328.95
이자보상비율(건설업)	539.16	523.75	443.49
매출액영업이익률(전산업)	5.64	4.21	4.24
매출액영업이익률(건설업)	4.95	4.77	4.73
금융비용부담률(전산업)	1.20	1.29	1.29
금융비용부담률(건설업)	0.92	0.91	1.07

❒ **안정성**

- 2020년말 국내 전산업 분야의 부채비율(115.7% → 118.3%)과 차입금의존도(29.5% → 30.4%)는 전년보다 상승하였음
- 건설업의 경우에도 부채비율(105.7% → 109.1%)과 차입금의존도(22.8% → 26.8%)가 각각 전년보다 상승했지만, 전체 산업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

주요 안정성지표

(%)

	부채비율			차입금의존도		
	2018	2019	2020	2018	2019	2020
전 산 업	**111.1**	**115.7**	**118.3**	**28.8**	**29.5**	**30.4**
건 설 업	110.5	105.7	109.1	23.1	22.8	26.8

◈ 일산대교 공익처분 두고 논란

○ 경기도가 사상 처음으로 민간투자방식의 일산대교에 대해 공익처분을 전격 단행하면서 민자사업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대한 논란 확산

○ 지자체 등 주무관청이 손바닥 뒤집듯 민간사업자의 사업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한 것이어서, 경기도가 민간사업자에 제대로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민자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

<주요내용>

❒ **현황**

- 경기도가 10월27일 정오부터 ㈜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함에 따라 유료통행 도로였던 일산대교가 무료통행도로로 전환
- 일산대교는 경기 고양시 법곳동~김포시 걸포동 간 1.84㎞를 잇는 민자도로로, 한강교량 28개 중 유일한 민자도로로, 민자 1480억원 등 총 1784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고, 이번에 경기도가 공익처분을 결정하였음
-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손실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보상금액을 정하도록 규정
- 경기도는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고, 전체 보상금액은 국민연금의 기대수익을 고려해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결정

❒ **문제점과 전망**

- 경기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은 민자 대상사업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으로, 민자사업에 대한 공익처분은 이번이 첫 번째 사례
- 민간업계 일부에서는 일산대교의 기대수익이 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,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연간 매출액은 300억원 미만으로, 7000억원 규모의 기대수익은 산출 불가능한 수치라며 2000억원대 보상금액을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
- 전체 보상금액 산정을 둘러싼 경기도와 민자시장 간 전망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일산대교의 전체 보상금액 산정이 일산대교 공익처분의 최대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
- 또한 일산대교를 주로 이용하는 인구는 고양시, 김포시, 파주시 등 경기도 인구의 15% 수준에 불과한데, 일산대교의 보상금액을 경기도민 전체가 떠안아야 하는 것도 논란
-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시행한 '공익처분'에 대해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㈜는 10월27일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
- 이번 공익처분은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의 사업권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며 민자시장에서 주무관청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한 가운데 적절한 보상조차 외면한다면 향후 신규 민자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

◈ 서울시, 공공공사의 '하도급대금 직불제' 의무화

○ 10월27일 서울시는 하도급대금 직불률을 100%로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시 발주 공공건설공사의 '하도급대금 직불제'를 2022년1월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힘

○ 이를 위해 서울시는 (1)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의무 제출, (2)선지급금 직불 간주처리 및 제도 개선, (3)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 통한 선급금 직불 기능 추가 등 3가지 개선대책을 마련

<'하도급대금 직불제' 의무화를 위한 3가지 개선대책>

❒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의무 제출

- 서울시 공공 발주 건설공사장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는 내용의 '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' 제출을 의무화
- 시는 「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」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, 합의서 의무 제출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는 계획

❒ 선지급금 직불 간주처리 및 제도 개선

-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'선지급금' 방식도 직불제로 간주
- 수급인(건설업자)이 기성금(공사가 이뤄진 만큼 공사 중간에 계산해주는 돈)을 일단 하수급인에게 먼저 선지급하고, 이후 발주자에게 청구·수령하는 방식으로,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직불제와 동일한 수령 효과가 있음
- 또한,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선지급금에 관한 자세한 거래사항을 계약내용으로 반드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

❒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 통한 선급금 직불 기능 추가

-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'하도급지킴이'의 선급금(선금) 직불 처리 기능을 추가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

◈ '도시개발법 개정안' 의원 입법발의

○ 10월22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시행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민간사업자 이윤율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'도시개발법 개정안'을 대표발의함

○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 사업마다 여건이 다르고, 리스크가 큰 도시개발의 성격상 모

든 사업에 일률적인 수익률을 적용하는 것이 어불성설인데다, 리스크는 고스란히 떠안은 채 수익률만 제한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역할이 위축될 수 밖에 없어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음

<개정안 주요내용>

❒ **공공시행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민간사업자 투자지분 및 이윤율 제한**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,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도록 함

◈ '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' 제정안 행정예고

○ 10월21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 발전 및 건설공사의 안전성·생산성 향상을 위해 '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'을 마련하여 행정예고

<제정안 주요내용>

❒ **스마트건설기술 마당**

- 스마트건설기술 마당(스마트건설기술 자료 제공을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)의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운영기관(스마트건설지원센터)의 업무범위, 건설기준 및 공사비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(국가건설기준센터,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등),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 신청, 등록절차, 재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

❒ **스마트건설기술의 활용**

-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공사 적용 및 활용 권장을 위해 현행 발주제도 및 심사기준(기술형입찰, 종합심사낙찰제 등)의 평가항목 등의 조정 방안, 건설기준 및 공사비 검토 의견 반영 등 지원 방안 등을 제시

❒ **스마트건설기술 사후의견**

-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용실적 관리 및 유사 건설현장의 적용 유도를 위해,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의견서를 작성하여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의 운영기관에 제출토록 함
- 운영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발주청의 사후의견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 등을 소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

◈ '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' 입법예고

○ 기획재정부는 10월21일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,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'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'을 입법예고

<개정안 주요내용>

❒ **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**

-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시범운영하여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 제도를 도입
- 이는 현행 계약제도가 정형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혁신기술·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, 새로운 계약제도를 도입하여 혁신기술·신산업을 지원하고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

❒ **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완화**

- 분할 가능한 공사·물품·용역의 일부 완성부분을 인수한 경우, 해당 부분의 계약보증금은 국고귀속에서 제외
- 이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

❒ **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**

-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정부위원을 축소(9→7명)하고, 민간위원을 확대(6→8명)
- 이는 계약제도 관련 민간 전문가를 확대함으로써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